

# 「도시철도 무임승차 손실 국비 보전 촉구 결의안」 에 대한 제안 설명

□ 존경하는 박중화 위원장님!

그리고 선배·동료 의원님 여러분!

안녕하십니까?

국민의힘 서초구 제4선거구 최호정 의원입니다.

□ 지금부터 『도시철도 무임승차 손실 국비 보전 촉구 결의안』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

□ 먼저 결의안의 취지를 말씀드리면,

1984년 중앙정부의 노인복지법 26조에 따른 시행령을 근거로 도입된 법정 무임승차로 인한 적자 누적은 지속되고 있습니다. 2018년 이후 최근 5년간 서울시의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연평균 운송적자 9,153억원 중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은 3,165억원으로 전체 손실의 약 35%를 차지하고 있습니다.

□ 또한 서울의 총 인구는 감소하는 반면 65세 이상 노인

인구는 지난해 17.5%, 2년 뒤인 2025년에는 20.1%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어 노령인구 증가에 따른 도시철도의 손실은 계속 증가해 지자체의 재정엔 큰 부담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.

- 상황이 이러함에도 중앙정부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 32조에 의거해 한국철도공사(코레일)에만 무임손실에 대한 국비를 지원할 뿐, 지자체에는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. 서울시는 이를 해결하고자 도시철도 무임승차 손실 부담에 대한 국비 지원을 국회와 정부에 지속적으로 요청했습니다.
- 그러나 국회는 도시철도법 개정안 처리를 미루고 있으며, 정부도 어떠한 지원과 대안 마련의 노력 없이 지자체와 도시철도 운영기관에 모든 책임과 비용을 전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.
- 서울시민을 넘어 2천500만 국민이 이용하는 도시철도가 공공교통으로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국회는 정부의 무임승차 손실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도시철도법 등 관련 입법안 처리를 해야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.

- 이에 본 촉구 건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으며,  
주요내용으로는 지자체의 무임승차에 따른 입법 및 예산 지원의 명문화 하는 것입니다. 국회에게 도시철도법 등 공익서비스와 관련한 입법안 처리를 촉구합니다.
  
- 정부에게도 한국철도공사와 같이 소관부처인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이 손실액에 대한 예산을 지원하도록 촉구하는 바입니다.
  
- 존경하는 박중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!  
국가가 주도한 공익서비스인 도시철도 무임승차가 본 취지와 다르게 철도 경영과 지자체의 재정건전성을 위협해서는 안됩니다.
  
- 이에 본 의원은 2천500만 국민이 이용하는 도시철도가 공공교통으로서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, 이용객에 대한 안전 및 철도 서비스의 향상을 위해 정부와 국회의 보다 책임있는 자세를 요구하며 촉구결의안을 발의했습니다.
  
-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의 발의 취지를 이해하셔서 교통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,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